

## 大學 자율성과 總·學長의 위상

林 榮 一  
(慶南大 社會學科)

## 1. 大學 自律의 本質과 意義

시민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친 국가의 직접·간접 통제와 규제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각 부분별·계층별 결사체들의 자율 능력을 고양시켜 나가는 것이 오늘날 이야기되는 社會民主化의 주된 내용이라 할 때 대학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정은 이와 다를 바 없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시민적 제 권리의 보장은 물론 기본적인 인권조차도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행사에 의해 근본적으로 부정되어 왔는데, 최근의 사회 전반에 걸친 민주화 운동의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경우 그것이 한 사회의 가장 고도의 정신적 진리 탐구 기능의 제도적 집약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학사 행정을 포함한 대학 운영 전반에 걸친 국가의 통제와 규제의 손길은 거두어지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우리의 대학은 자신이 받아들여 교육할 학생들의 선발권조차도 온전히 부여받고 있지 못하다. 최근 들어 우리의 대학들은 대학교육에 대한 이러한 국가 통제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자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나마 몇 가지 결실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예컨대 과거와는 달리 전국의 거의 모든 대학이 교육법 상의 규정이나 교육부의 행정 방침과는

상관없이 과거의 비민주적·비자율적인 학칙을 비교적 합리적인 내용의 것으로 개정하고, 교육부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학내에서 이를 자율적으로 시행해 가고 있다. 총·학장의 경우 과거처럼 교육 당국이나 재단에 의해 專斷적으로 임명되는 경향은 점차 불식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대학 구성원들이 직접 총·학장을 선출하여 재단이나 교육부의 형식적인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경향의 연장선상에서 점차 대학의 설립과 경영 전반에 관해 국가의 직접 통제를 벗어나 독자적인 자율적 경영을 보장받고자 하는 요구들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긍정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모습 그 자체가 대학 자율의 핵심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학의 조직과 행정 그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대학은 오히려 가장 긴밀한 '사회적'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계급·계층별, 집단별, 나아가 사적인 개인의 이해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 사회의 모든 조직체들과는 달리 대학은 그러한 이해 관계를 뛰어 넘는 일반적인 사회적 기능을 위임받고 있는 특수한 조직이기 때문이다. 대학은 진리 탐구의 자유(Freiheit der Wahrheitsforschung)를 핵심으로 하는 '학문·사상의 자유'를 배타적으로 부여받고 있는 유일한 조직으로, 이는 기본

적으로 대학이 계급·계층별, 집단별, 기타 사적인 이해 관계에 구속받지 않는 보편적 가치의 구현체로 자리잡을 것을 전제로 한다. 대학 행정이나 경영의 자율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대학이 지니는 이러한 공적인 책무와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부수적 조건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의 경우는 물론 서구의 모든 나라들에 있어서도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특권적 지배층은 자신들의 계급적 특수 이익의 옹호와 보장을 위해 대학에 대한 통제와 규제를 쉽사리 포기하려 들지 않는다. 서구 대학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우리는 이러한 대학 외부로부터의 영향력 행사를 배제하기 위한 대학인들의 절기찬 노력이 계속되어 왔음을, 그리고 그 결과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규범의 하나인 학문·사상의 자유, 자유로운 진리 탐구의 보루로서의 대학이 한 사회의 현재를 이끌어 가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창조해 가는 역할을 자임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고 있다. 대학의 자율을 말하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이 점을 들각하고 단순히 형식적이고 외부적인 조건으로서 대학 행정과 경영상의 독자적 권한만을 추구하게 될 때 그 결과는 자명하다. 즉, 대학의 자율은 곧 대학의 설립과 경영의 주체임을 자임하는 대학 행정 당국이나 제단의 전단적인 대학 운영권의 보장으로 귀결될 뿐이며, 그 속에서 대학 자율의 원래적 가치인 학문·사상의 자유와 자유로운 진리 탐구의 정신은 오히려 대학 내적으로 억압되고 질식하게 되는, 그리하여 장기적으로는 대학 스스로가 자신의 사회적 권위의 책무를 포기하고 결국은 형식적 자율의 조건마저도 다시 외부의 힘앞에 반납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가 도래할 것이다.

## 2. 大學의 位相과 構成主體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를 기치로 내세우는 모든 나라에서 자유로운 진리 탐구의 정신, 학문·사상의 자유는 일종의 생득적인 헌법적 권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물론이고 심지어 서구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조차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러한 헌법적 권리가 '절대적으로' 부여되고 있는 경우를 찾아 보

기는 힘들다. 예컨대 '자유'의 나라'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50년대의 소위 '메카시즘'은 1회적 현상으로 나타났다 사라진 것이 아니다. 미국 사회에서도 소위 '國益의 차원'에서 가해지고 있는 정치권력의 국민들에 대한 사상·이념적 통제의 거름장치는 알게 모르게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는 심지어 법률 규정으로써 사상적 통제의 대상자들을 합법적으로 규제하고 공직에서 배제한다. 서구의 민주주의를 더이상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전투적 민주주의'라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적어도 대학에 대해서만은, 그리고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리 탐구의 활동과 교수의 내용에 대해서만은 어느 경우건 예외없이 제한없는 학문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배타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정하는 경우는 없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자유로이 탐구하고 분석·조망하며, 나아가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을 모색하는 일이 포기될 수는 없으며, 이것이 협애한 계급·계층적, 집단적 혹은 사적인 이해 관계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여타의 사회 조직이나 단체, 심지어는 국가권력에도 위임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에서 대학의 자율을 말할 때 우리는 반드시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대학의 자유와 더불어 사회 내의 여타의 대학외적 힘으로부터의 대학의 자유를 동시에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학의 기능과 사회적 역할은 날이 확대되고 복잡다기화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혁명의 지속과 그것의 사회적 응용에의 수요 확대에 따라 대학교육 자체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은 이미 규모의 면에서도 사적 개인이나 집단의 전단적인 경영을 허락하지 않는 대규모의 조직체가 되고 있고, 복합적인 사회적 기능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동원되어야 할 재정의 규모도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다. 이를 감당해낼 수 있는 대학 경영의 주체는 점차 대규모의 자원 동원 능력을 가진 거대 자본이나 아니면 국가 그 자체일 수밖에 없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처럼 다양한 방

식과 경로를 통한 대규모 자본의 대학 운영에 대한 재정 기여가 큰 비중을 차지하거나, 독일 등과 같이 대학 그 자체가 사회화된 제도로 자리잡아 국가의 예산 배정으로 대학의 모든 기본적인 재정 수요를 충당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건 재정 기여자가 대학의 행정과 학사 운영에 직접 개입하고 있는 경우는 없다. 그 이유는 다름아니라 앞서 말한 대학의 본래적 위상과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널리 자리잡고 있고 대학인들 자체가 힘겨운 노력을 통해 그것을 지켜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아직 우리의 대학은 대학의 사회적 기능과 위상에 대한 명확한 합의의 구도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정치권력과 대학 간의 관계, 서로 다른 대학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서 수 많은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사립대학 재단의 일정한 목적과 담합 하에 이루어진 '90년의 사립학교법 개정'은 이러한 우리의 상황을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사례였다. 대학민주화의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교수와 학생, 직원 등의 서로 다른 구성 주체들이 각각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과거와는 달리 대학에 대한 국가와 재단의 전횡적 지배가 더이상 불가능하게 되자, 정부는 대학자율화의 미명 하에 거의 무제한적인 대학운영의 대내적 권한을 재단에 위임하는 개악된 법안을 만들어 내었다. 대학이 '기업체'가 아닌 한, 대학이 '투자자의 권리와 이해를 보장'하는 이윤동기적인 원리로 경영될 수는 없는 일이다. 대학은 교수와 학생이 중심이 되어 학문을 탐구하고 높은 수준의 지적 가치를 생산해 내며 그 결과를 학생들에 대한 교수와 학술 활동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고유하고도 특수한 기능의 전담자이다. 따라서 국가와 재단은 이러한 대학 고유의 기능을 원활히하기 위해 재정을 조달하며 직원을 고용하여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이지, 교수와 학생을 '관리'하거나 나아가 학문 탐구·전수의 과정을 감독하는 지배 주체가 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여전히 비민주적인 정치권력의 속성의 반영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을 사적 개인의 전유물로 보는 전근

대적이고 천민자본주의적인 낡은 소유 의식으로 인하여 대학 자율의 진정한 의미와 의의는 여전히 부정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셈이다. 대학의 주체는 의연히 교수와 학생이다. 이것은 단순히 대학 구성 집단의 하나로서의 집단 이기적 주장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한 사회 내에서 대학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그것이 인식되고 자리잡아 가는 지난한 갈등의 과정을 통해 역사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그리하여 대학 자율의 의미를 권력과 돈의 친박하고 단기적인 이해 관심의 논리로 환원하여 해석하는 일은 대학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이며, 그 결과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파멸적인 것으로 나타날 뿐이다.

### 3. 大學의 自律과 總·學長

정치권력과 재단의 전횡으로부터 대학 본래의 기능을 지켜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대학에 대한 정치권력의 통제와 규제의 매커니즘이 엄연히 상존하며, 사학의 비중이 70%를 넘는 기형적인 대학교육의 현실 속에서 사학 재단의 전횡이 극성을 부리는 와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총·학장의 역할은 자못 막중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까지 대학의 총·학장은 국·공립의 경우는 거의 전적으로 국가권력에, 그리고 사립의 경우는 재단에 그 임면권이 장악되어 왔다. 그 배혜는 우리가 익히 아는 바이다. 지금까지 대학의 총·학장은 정치권력과 재단의 대학 통제를 위한 중간적 대리자로서의 위상을 거의 벗어나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민주화의 열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전국의 각 대학에서 전개되고 있는 대학의 자주화·민주화의 요구에 있어서 그 핵심적 고리의 위치에서 갈등의 당사자가 되었던 것도 대학의 총·학장이었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대학 자율화의 문제를 진리 탐구의 자유, 학문·사상의 자유라는 그 본연의 핵심 가치와 연관시켜 이해하는 한, 대학 총·학장의 가장 중요한 1차적인 임무는 정치권력과 재단에 의연히 맞서 이를 지켜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머지의 문제들—예컨대 행정과 관리의

문제, 재원 염출의 문제 등—은 총·학장 본연의 임무는 아니며, 전자의 역할에 충실하는 가운데 실용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일들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총·학장의 위상을 이러한 그 본연의 핵심적 임무에서 유추하지 않고 효율적인 관리와 투자 재원 조달자로서의 행정가적 모습에서 구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대학의 대부분은 아직 그렇게 한가한 상황에 있지 못하다. 그리고 대학의 제정은 결국 사회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에서 생산되는 지적 탐구와 교수의 결과들은 그것이 학술적 연구 성과이든 ‘우수한 인재’이든 결국 사회적 공유 자산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권력이나 재단으로부터의 외압에 맞서 대학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대학 총·학장은 무엇보다도 대학을 진리 탐구의 장, 학문과 사상의 자유로운 논구와 토론의 장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이 점이 현재 여러 대학에서 총·학장을 교수들의 직접 선출 방식으로 뽑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이다. 교수들만의 참여에 의한 총·학장 선출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의 대학 현실은 다른 모든 요구들에게도 불구하고 대학 자율의 근본 이념인 진리 탐구와 학문·사상의 자유조차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그러므로써 대학의 사회적 권위 자체가 끊임없이 흔들리는 처지를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학의 교수들 역시 사적인 이해 관계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사실상 모든 대학 교수들이 진리 탐구의 보편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학문과 사상, 그리고 과학과 학술 활동은 그 자체가 그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특수한 이해 관계를 넘어서는 보편적 진리의 객관적인 추구가 학문적 성과를 보장해 주는 유일한 길임을 체득하게 하는 것이다. 사회 전반의 인식 상황이 이러한 학문 활동의 본연적 속성을 이해하는 수준에 있지 못할 때, 더욱이 정치권력과 자본의 논리가 이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유린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을

때, 심지어 대학 내에서조차 반지성적이고 反과학적·反학문적인 세속의 논리가 지배하는 상황이 계속될수록 대학을 권력과 돈의 논리가 아닌 ‘진리의 논리’로 파악하려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다.

대학 내의 ‘등록금 인상’ 문제로 시위를 벌이던 한 학생이 경찰에 의해 생명을 빼앗김으로써 빚어진 최근의 격렬한 정치사회적 진통의 과정은 우리의 대학 현실을 다시 들여다 볼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는 현재의 우리 대학이 그것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전혀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잘 드러내 주는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전국 대학의 총·학장들이 보여준 정치권력에 대한 수동적이고 비주체적인 모습들은 다시 한번 우리를 씩씩하게 하였다. 애초부터 명약관화한 성격의 이 문제에 대해 대학의 총·학장들은 책임과 권위를 지닌 ‘대학의 입장’을 전혀 대변하지 못하고 말았다. 더욱이 급작히 ‘소집’된 회의에서 과거 5공 때의 그 악명높았던 ‘학원안정법’을 연상시키는 대학 안정화 대책을 서둘러 발표하는 모습은 대학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차마 바로보기 민망한 부끄러운 광경이 아닐 수 없었다. 오늘날 학원의 사정을 조금이라도 눈여겨 관찰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학원 문제가 그처럼 편의적이고 일시적인 ‘조치’로써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는 믿지 않을 것이다. 정치권력의 비민주성이 해결되어 정치 자체가 안정화되지 않는 한, 그리하여 우리 사회에 단연된 온갖 갈등 요소들이 제도적인 해결의 통로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 학원 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불가능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역시 대학이 대학 본래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하는 일이고, 현재의 상황에서 그 핵심은 외부적인 힘을 차단하고 진리 탐구의 장으로서의 대학의 모습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북경대학의 초대 총장이었던 채원배는 군벌과 봉건적 토착 세력들에 단호히 맞서 대학과 대학인의 과학적 학문탐구의 정신을 구현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5.4 운동의 주역이었던 북경대학 학생들을 거리로 뛰쳐 나가게 하였던 것도 그였고 그들을 다시 대학으로 불러 들였던 것도 바로 그였다.

#### 4. 맺음말

대학 총·학장의 선출 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대학을 구성하는 주체 집단들 간에 이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각이 교차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예민한 입장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대학 총·학장의 선출 문제를 둘러싼 그간의 여러 입장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대학 총·학장의 임면권은 ① 대학의 설립 주체(사립의 경우 재단, 국·공립의 경우 국가나 자치단체)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 ② 대학 교수 집단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 ③ 운영 주체들(교수, 학생, 직원) 모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 ④ 설립 주체를 중심으로 하되, 동문을 포함하여 대학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사들이 어떤 형식으로는 이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그것이다. 이를 단순히 총·학장 선출 방법의 문제로만 보면 어느 경우든 장·단점을 골고루 지니고 있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 대학의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할 때, 특히 대학의 자율성을 굳건히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사를 총·학장으로 내세우고 그에게 대학 구성원들의 힘을 십어줄 수 있는지의 여부일 것이다.

5공 시절 전통있는 국내 명문 사학의 총장을 지내다 권력의 강압에 의해 물러나야 했던 김준엽 박사는 최근 그의 회고록에서 우리나라 사학에서의 총·학장 자격 요건을 10가지로 간추려 놓았다(「신동아」, '90년 11월호). 여기에는 행정 능력이나 기금 모금 능력 등도 포함되지만 그에 의하면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신과 신념을 가진, 그리고 학문적 업적을 쌓은 존경받는 '학자'의 조건이다. 우리 대학의 현재의 상황, 특히 사립대학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대학인이라면 재정이나 행정문제, 더욱이 대학 '경영'의 문제가 대학 자율화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은 대학 본연의 위상을 하루빨리 확립해 가야 할 때이다. ■